



# 이슈와 논점



이슈와 논점 | 제1461호 | 2018년 5월 4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이내영 | www.nars.go.kr

## 일본의 2018 남·북 정상회담 평가 및 주요 쟁점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향 박 명 희\*

### 1. 들어가며

지난 4월 27일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공동의 목표 확인’, ‘금년 중 종전 선언 및 휴전협정의 평화 협정으로의 전환’, ‘모든 적대 행위의 전면중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켰고, 특히 일본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이는 그 동안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및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발언자 역할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과거와 달리 일본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up>1)</sup>

지난 3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발표 이후 진행된 미·일 정상간 전화통화(3.8), 한·일 외무장관 회담(3.17), 미·일 정상회담(4.17), 한·일 정상간 전화통화(4.24)에

서 일본이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 유지’와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의 제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최근 일본의 국내 정치 및 외교에서 북한 이슈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 정부 및 주요 언론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일본 내 쟁점 동향을 검토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일본의 2018 남·북 정상회담 평가

#### (1) 일본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평가

일본 정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주목해왔다.

남·북 정상회담 직후 일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아베총리(安倍晋三)는 27일 「판문점 선언」 발표 이후 ‘북한을 둘러싼 제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향한 전향적인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1) 内閣府 <http://survey.gov-online.go.jp>

평가하고, 향후 북·미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기대하고, 주시할 것’임을 밝혔다.<sup>2)</sup>

고노(河野太郎)외상은 외무대신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의사를 문서상에서 확인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일보 전진’이라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및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 미사일을 폐기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북·미 정상 회담의 결과에서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제외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다.<sup>3)</sup> 그리고,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는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를 확고히 유지하고, 최대한의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본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 (2) 일본 주요 언론의 남·북 정상회담 평가

4월 28일 일본 주요 신문사의 사설을 보면,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을 제외한 일본의 주요 신문사들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위한 일보가 되었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이나,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비핵화 보다는 남·북간 긴장완화에 초점을 두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점,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삽입된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首相官邸. ‘南北首脳会談についての会見’  
[https://www.kantei.go.jp/jp/98\\_abe/actions/201804/27snkrbura.html](https://www.kantei.go.jp/jp/98_abe/actions/201804/27snkrbura.html)(2018년 4월 27일)

3)外務大臣談話. ‘南北首脳会談について’  
[http://www.mofa.go.jp/mofaj/press/danwa/page4\\_003960.html](http://www.mofa.go.jp/mofaj/press/danwa/page4_003960.html)(2018년 4월 27일)

[표] 일본 주요 신문 사설(4.28)

신문사	사설제목
아사히	남·북 정상회담 평화의 정착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
마이니치	11년만의 남·북 정상회담,비핵화의 흐름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일본경제	판문점 선언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연결시키자
요미우리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의 길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산케이	남·북 정상회담 미소(微笑)보다는 진정한 비핵화를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가 논의의 방향으로 따라서는 주한 미군의 감축 및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보수·진보 언론을 포괄하여 등장하고 있다.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에 대해 진보적 성향의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은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의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는 반면,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은 핵문제의 해결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통한 북한의 체제보장을 언급하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 3. 주요 쟁점에 대한 동향

최근 일련의 북한의 태도변화와 관련하여 일본 내에서 부각되고 있는 쟁점은 첫째, 일본의 대북정책 노선의 적합성 여부 둘째,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 셋째, 납치피해자문제의 진전이다.

### (1) 일본의 대북정책 노선에 대한 이견부각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을 유지하고,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속적인 압력의 결과’로 해석하고 이를 아베 내각의 외교적 성과로 강

조하기도 하였다.<sup>4)</sup>

한편, 최근 아베 내각의 미국 및 대북 압력 일변도의 외교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근거는, 아베 총리가 100% 미국과 인식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지만, 지정학적인 차이로 인하여 미·일의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에게는 위협이지만, 미국에게는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납치 피해자 문제도 일본에 국한된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전격적인 북·미 대화 결정이 압력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약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4월 27일 기자회견에서 고노외상이 「판문점 선언」의 ‘한반도의 비핵화’ 문구에 대해서 한국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주한미군도 핵이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의 비핵화’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언급<sup>5)</sup>한 것은 회담 이후를 우려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향후 북·일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내에서 여전히 북한에 대한 입력 강화에 대한 지지가 높게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대한 지지(46%)가 압력중시(45%) 의견을 상회한 것도 주목할 만 하다.<sup>6)</sup>

4) 読売新聞 2018年 4月 24日

5) 外務大臣臨時會見記録 (2018年 4月 27日)  
[http://www.mofa.go.jp/mofaj/press/kaiken/kaiken4\\_000695.html](http://www.mofa.go.jp/mofaj/press/kaiken/kaiken4_000695.html)

6) 2017년 9월 11일 요미우리신문의 조사에서는 대북 제재·압력중시 51%, 대화중시 38%였으나 2018년 4월 23일 조사에서는 대북 제재, 압력중시 45%, 대화중시 46%로 나타남.

## (2)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반된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4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 초대형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사업의 수순을 통한 핵무기의 병기화 기 실현’,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풍계리 핵 실험실 폐기’ ‘핵무기의 불사용 및 핵기술 불이전’ 등을 담은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이 안전보장을 약속한다면 지금이 비핵화를 위한 호기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도 있으나,<sup>7)</sup> 대체로 북한의 발표에 대해 일본의 주요 언론은 북한의 핵실험 중지선언은 긍정적이나, 핵실험 포기를 비핵화의 의사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조의 사설을 게재하고 있다.<sup>8)</sup> 특히 비핵화의 범위에 있어서 북한이 포기한 것은 새로운 핵·미사일 발사에 한정된 것이며, 이미 개발한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일본 내에서는 북한이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핵무력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정된 수순이며, 비핵화로의 입장 전환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sup>9)</sup>

7) 朝日新聞 2018年 4月 21日 磯崎敦仁 慶応大准教授 인터뷰

8) 4월 21일 일본 주요 신문의 사설제목은 다음과 같다. 아사히신문 ‘북한의 결정. 완전한 핵 포기의 추구를’, 마이니치신문 ‘실험중지 선언 의도를 진중하게 지켜보아야 한다’ 일본경제신문 ‘핵실험중지로는 핵 포기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요미우리신문 ‘핵실험중지 비핵화의 의사표명은 없었다.’ 산케이신문 ‘북한의 표명 핵보유국 선언 아닌가’

9) 毎日新聞 2018年 4月 14日, 平岩俊司 南山大学教授 인터뷰

### (3) 납치피해자 문제

아베 총리는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 회담에서 북핵 문제 이외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가 의제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마일 정상회담(4/17), 한일 정상간 전화통화(24)를 통해 요청하였고, 양 정상으로부터 긍정적인 회답을 받았다. 4월 29일 현재까지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서 납치피해자 문제에 대한 언급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납치피해자 가족 등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산케이신문 등 보수적 언론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고노외상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에서 납치피해자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다양한 루트를 통해 북한에 일본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 4. 한국의 대응방향

한일 양국의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이 높지 않은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역할이 확대되면서 한국 내에서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낮아진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다음의 측면에서 한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일본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 고려해야 하며, 일본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일간 관계개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일간 사전 입장의 조율이 필요하다. 북한이 경제력 강화라는 국가 전략에 집중한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 및 경제지원을 고려할 때 여러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일본을 제외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한국은 그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안보적 측면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해 왔으나, 향후 통일 외교의 측면에서도 일본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2002년 평양선언에서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총리는 북한이 핵 실험을 중지하고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 국교 정상화와 경제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재산청구권 형태로 지원을 받을 경우 대략 그 규모는 100억불 정도<sup>10)</sup>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기초 자원이 될 것이다.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일본의 협력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1998.10.8.)'의 20주년이라는 모멘텀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일 양국정상은 최근 정상회담(2018.2.9.)에서 이러한 계기성을 살려 양국관계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일치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과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지향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해 보다 건설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한국의 대북정책에 일본이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납치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국내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향후 납치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북·일간 교섭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 정부가 신속히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10) 류길재. 2009. 「남북한 관계와 한일협력」.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p.42.